

제 25-04호

2025. 04. 24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책임작성

이은실 선임연구원

(044-960-5355 / eslee@kosi.re.kr)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

※ KOSI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서론
2. 미국 트럼프 관세 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3. 관세로 인한 한국 산업 전망
4. 시사점

요 약

-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와 업계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 확산 조짐
 - 초강경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과 여론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며 실리 극대화를 추구했으나, 여야당 모두 관세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강경·강온·중립·親美·親中 노선을 채택, 하나의 국가가 반드시 하나의 대응 패턴을 띠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정치적 선택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대응기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EU와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는 양상이며, 중국 역시 관세 충격을 틈타 동맹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표 1 美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기조

구분	아시아					미주			유럽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EU	영국
강경										
강온										
중립										
親美										
親中										

◆ 미국發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철강·알루미늄)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해당 산업 위축 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 가능성
- (자동차) 완성차 대기업의 對美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부품 중소기업의 위축 우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여력 부족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 예상
- (반도체) '24년 對美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업계는 당장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이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 가중 예상
- (의약품·구리·목재)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의약품, 구리, 목재에 있어서는 한국의 對美 수출량과 흑자규모가 작아 관세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상호관세) 전반적으로 對美 수출 감소 등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나, 韓·美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의제에 따라 상호관세를 인하 여지가 있는 가운데, 태양광·조선·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기업의 수혜 가능성 전망

◆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 가능

- 對美 무역흑자 완화 위한 3-track 접근
-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
-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
-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M&A 시장 모니터링
- 우리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정부 지원 기조 전환

01 | 서론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취임 이후, 관세부와 예고와 발효·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경제와 안보에 대혼돈을 초래

- 초강경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과 여론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며 실리 극대화를 추구했으나, 여야당 모두 관세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
- 주요 외신들과 일부 국가들 역시 '자고 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 '사이코 드라마' 등 트럼프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에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으며, CNN은 '세계가 트럼프의 채찍질 리더십에 인내심이 점점 닳고 있다'고 보도

◆ 특히 중국만을 제재 대상으로 했던 트럼프 1기와 달리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역 분쟁 확산 양상, 한국에 미칠 피해 규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 관세 인상을 유발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자국 상품으로 대체할 가능성
- 이는 '24년 기준 GDP 대비 수출 비중 36.6%로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에 있어 수출 기업의 시장 접근성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 등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과 성장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도 존재

◆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관점에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외교 기조를 확인하고,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
- 관세로 인한 한국 산업 전망을 조망함으로써 산업별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섹터 발굴
- 앞선 논의를 토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무역 분쟁 확전으로 인한 중국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제시

02 | 미국 트럼프 관세 부과 현황과 주요국 대응

가. 미국 관세 부과 현황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예고와 유예를 거듭하며 국제 사회와 업계에 혼란을 가중,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 부과 및 전 세계 대상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관세 분쟁 확산 조짐

- 이 밖에도 반도체·의약품·구리·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거나,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향후 관세 적용 품목은 확대될 전망

표 2 미국의 관세 부과 주요 일지

날 짜	주요 내용	날 짜	주요 내용	날 짜	주요 내용
'24.11.6.	트럼프, 美47대 대통령 당선	'25.2.14.	트럼프, 4.2일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25.4.2.	트럼프, 상호관세 공개: 기본관세는 4.5일, 개별관세는 4.9일 발효
'25.1.20.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관세부과 예고(2.1일~)	'25.2.26.	트럼프, 구리에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25.4.3.	美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발효
'25.1.21.	트럼프, 중국에 2.1일 관세부과 예고, EU도 대상 될 가능성 시사	'25.3.2.	러트닉, 캐나다·멕시코 관세율은 유동적 입장 발표	'25.4.8.	트럼프, 보복관세 예고한 중국에 104%의 관세부과 발표, 4.9일 발효
'25.2.3.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25.3.4.	트럼프,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25.4.9.	트럼프, 보복대응한 중국에 관세 상향(125%), 나머지 국가들에는 10% 기본 관세만 남기고 90일 유예
'25.2.4.	트럼프,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	'25.3.4.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25.4.11.	트럼프, 휴대폰,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발표
'25.2.10.	트럼프, 3.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부과 발표	'25.3.12.	트럼프,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발효	'25.4.12.	4.11일 관세 철회한 제품에 품목별 관세 적용 예고
'25.2.13.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	'25.3.26.	트럼프, 4.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5.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예정 발표	'25.4.14.	트럼프, 자동차 관세 유예 가능성 시사
				'25.4.20.	트럼프, 환율조작 등 무역 상대국의 8가지 비관세 장벽 적시

* 자료: 각종 기사들을 토대로 저자 작성

◆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3/12)와 자동차 관세(4/3),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4/9)이며, 간접적으로는 한국과 생산 연계성이 높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표적관세 부과 영향도 따를 것으로 예상

• (철강·알루미늄) ① 수입 관세를 인상(25%), ② 관세 면제조치(쿼터제) 중단, ③ 관세 부과 제품 확대(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까지 적용) 등의 조치 시행

* [對美 철강 수출국 순위] (1위)캐나다, (2위)멕시코, (3위)브라질, (4위)한국, (5위)독일, (6위)일본, (7위)대만, (8위)베트남, (9위)이탈리아, (10위)중국 등

[對美 알루미늄 수출국 순위] (1위)캐나다, (2위)UAE, (3위)한국, (4위)중국, (5위)바레인, (6위)아르헨티나, (7위)인도, (8위)멕시코, (9위)독일, (10위)태국 등 (美국제무역청, '24년 기준)

• (자동차)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 엔진·변속기·전자기기 등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부과 예정

* [對美 자동차 수출국 순위] (1위)멕시코, (2위)일본, (3위)한국, (4위)캐나다 등 (KITA, '24.11월 누적)

** 한국의 對美 자동차 수출규모는 '24년 기준 51조원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의 49.1%에 해당함. 한편 '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2위 역시 자동차('24년 약 7.5조원)이나, 주로 개도국에 대한 중고차 수출에 해당

• (상호관세)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4/5 발효)하고, 4월 9일부터는 총 57개국에 국가별 개별 관세율*을 대체 적용, 한국에 대해서도 25%의 추가관세 부과

* [주요국 개별관세(%)] 베트남(46), 태국(36),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0), 인도(26), 한국(25), 말레이시아(24), 일본(24), EU(20) 등

** 국가별 상호관세 공개 당일(4/2),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서 중국의 상호관세율은 34%에 기존에 2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54%였으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에 반발해 104% ➡ 125%로 상향, 중국에 총 145%의 관세 부과

-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이미 별도로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도 추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한국은 韓·美 FTA 체결을 통해 약 98%의 관세를 철폐하여 관세를 자체로만 따지면 對美 관세가 높지 않으나, 이번에 부과한 국가별 개별관세는 3월 31일 美무역대표부가 공개한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조치

* 무역장벽보고서에서 美무역대표부가 지적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장벽은 기술·검역·공공조달·서비스·디지털 무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총 22가지를 다루고 있으며, 지목된 분야는 향후 미국의 對韓 관세 부과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¹⁾

1) 부록 1참조

나. 주요국 대응기조

◆ 하나의 국가가 반드시 하나의 대응 패턴을 띄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정치적 선택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대응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상호관세 부과 前) 트럼프의 표적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인 親美 행보를 보이며, 미국산 제품 수입과 對美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미국으로부터 관세 제외 국가로 지정되는 등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 특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이후 각국 행보는 크게 엇갈려, 캐나다와 EU는 각각 60조·41조원에 달하는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멕시코와 브라질은 즉각적인 보복을 보류
 - 영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속 행보를 보이는 한편, 미국에는 신중론

표 3 美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기조

구분	아시아					미주			유럽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EU	영국
강경										
강온										
중립										
親美										
親中										

* 자료 : 각종 기사들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상호관세 부과 後) 큰 틀 안에서 상호관세 부과 전후 주요국의 對美 기조는 유사하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주요국은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는 양상이며, 중국 역시 관세 충격을 틈타 동맹을 확장하려는 움직임

- 중국·캐나다·EU 정도만이 이번 관세에 보복조치를 예고했으며, 상호관세 부과 전 가장 강경 기조였던 캐나다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강경 대응 기조가 다소 완화

* 다만 캐나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차량에도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

- EU 역시 강경대응 기조를 일부 완화, 미국에 보복관세 수위도 당초 계획보다 낮추는 한편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으나, 트럼프에게 거절당한 뒤 EU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34.4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승인(4/9), 4월 중순 발효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에 대화를 제안하며 협상 의사 표명

* EU는 이번 조치가 美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와 별개로 9일 발효된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 특히 이번 상호관세의 집중 대상이 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관세 부과 발표(4/4), 이에 미국이 對中 관세를 104%로 수정하자, 중국 역시 對美 관세를 84%로 상향(4/9)하는 등 미국의 관세 공격에 즉각 맞대응

- 또한 중국은 對美 희토류 수출 통제와 군수기업 제재 조치(4/4) 등에 이어 '6대 보복수단*'을 공개 하고(4/8), 향후 해당 분야에서 對美 제재 가능성 피력

* ①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②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③ 펜타닐 관련 미·중 협력 중단, ④ 미국의 흑자 품목인 對中 서비스 무역 제한, ⑤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사업 조사, ⑥ 미국 영화 수입 금지

- 눈에 띄는 점은 기존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 강경 대응한 EU가 최근 중국에 대해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오는 7월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으며, 韓·中·日 3국 역시 3월 22일 외교 수장 회의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전달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

- 중국 역시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이 밀어낸 동맹국들에 비자 면제, 투자 확대 정책을 제공하며 미국 대신 자국과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주변국과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외교 방침을 천명(4/9)

* 이후 14일,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을 방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세에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어 15~18일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방문, 21일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국방 수장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연대 구축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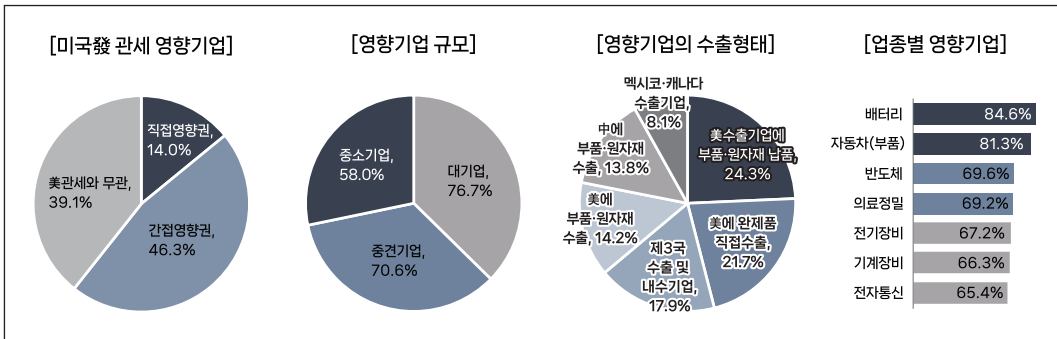
03 | 관세로 인한 한국 산업 전망

가. 품목별 관세

- ◆ 미국발 관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찍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최근(4.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60.3%는 미국발 관세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으며, 이들 중 50.8%가 중소기업인 가운데, 미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영향기업 비중은 배터리(84.6%) 업종에서 가장 높았음²⁾

그림 1 우리 제조기업의 미관세 영향 조사 결과



* 자료 : 대한상의(2025.4.1.), "우리 제조기업의 미관세 영향 조사(n=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

- (철강·알루미늄) 건설경기 침체·중국산 저가 공세로 공장 가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국 철강업체는 기존 연간 263만톤의 무관세 쿼터 폐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요 감소,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내 시장 유입 가능성에 직면

* 실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25.3월 우리나라의 철강제품 수출액이 전년비 10.6% 감소³⁾

- 한편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중소기업 관점에서 종사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고부가가치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커, 철강 산업 위축 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동반 위축 가능성

2) 대한상의(2025.4.1.), 「우리 제조기업의 미관세 영향 조사」

3) 산업부, 「'25.3월 수출입 동향」

* 실제로 3월말 국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42.8%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이들의 수출 피해액은 평균 26.3억 원, 매출 피해액은 41.4억 원에 달했음⁴⁾

-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체 철강 생산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목, 무작정 수입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나, 미국의 철강 관세 영향으로 인도, EU 등도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축소하는 등 철강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제3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추가 영향도 따를 예상

• (자동차) 한국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전반적인 가격상승에서 기인한 소비 위축으로 한국의 對美 자동차 수출 위축*, 관련 기업들의 시장 가치 하락**, 韓자동차 기업의 對美 투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축소 가능성***

*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 매길 시 올해 한국의 對美 자동차 수출은 전년比 18.6% 감소 추정⁵⁾

**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현대차·기아 주가 각각 7.6%, 6.2% 하락⁶⁾

*** 현대차 정의선 회장, 3.24일 백악관에서 對美 31조원 투자 발표, 해당 조치로 국내 생산 물량 33만대 축소 및 약 2만 개의 일자리 소멸 전망⁷⁾

-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은 내연기관(95%), 전기(82%), 수소(71%)이며, '23년 기준 국내 6대 자동차 회사 부품 납품액은 약 165조원⁸⁾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이 다수 종사하는 산업임

-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 미국 현지 생산기지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기업의 수출 물량 축소나 가격 조정 단행 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됨

- 다만,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경우 중국산을 배제하면 미국도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반도체) '24년 對美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업계는 당장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한국이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부담 가중 예상

*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비중은 '24년 기준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 등의 순임

• (의약품·구리·목재) 향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의약품, 구리, 목재에 있어서는 한국의 對美 수출량과 흑자규모가 작아 행정명령 영향권에 들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구리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있는 원자재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광물은 언제나 관세로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⁹⁾

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4.3.)

5) IBK경제연구소(2025), 「美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6) 한국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뉴시스('25.3.29) 기사 인용

7)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업계 전문가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경향신문('25.3.27) 기사 인용

8)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통계 자료

9) 한국경제(2025. 2. 26.)

나. 상호 관세

◆ 상호관세 시행 이후, 해외 주요 기관들의 상호관세의 파급영향 분석 결과, 對美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전 세계적 무역량 감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유발 예상¹⁰⁾

• WTO(2025)는 '25년 상품무역이 전년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24.10월 전망치(3.0% 증가)에서 크게 하향 조정했으며, 관세유예 끝나고 전면 시행 시에는 상품무역이 1.5%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¹¹⁾

• 특히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호관세 발효 시 '30년까지 미국의 상품 수입 30% 감소, 對美 수출은 중국 85%, 한국과 일본 등은 50% 이상, 베트남 75%, EU·인도 40%, 영국·브라질 15% 감소를 예상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 외 대다수 국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5% 미만으로 증가 예상*

* 교역 상대국이 미국 상호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보복에 나서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저가 제품 과잉공급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분배되면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 시사

◆ 다만 4월 24일(美현지시간) 韓·美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제시하는 의제들에 따라 상호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우리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존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호관세 인하를 위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별로 현행 25%에서 20~24% 수준으로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제시

* ❶ 상호관세 계산의 기준연도('24년)에 한국의 對美투자 증가로 수출액이 과대 추계된 점, ❷ 상호관세 대상품목의 모호성, ❸ 한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대체되는 미국의 對韓수입액 차감, ❹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태양광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태양광 수요 증가, 美의 對中 고율관세로 인한 중국 업체들의 수출 타격 등이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업계에 반사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밖에도 글로벌 해운사들의 탈중국 움직임에 'K-조선', 미국 내 생산 인프라에 기반한 ODM(제조자 개발생산) 방식의 'K-뷰티' 등의 산업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K-방산'의 경우에도 한국산 무기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상호관세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이나, 미국의 방위비 감축 예고 및 전 세계적 무기 수요 증가 기대로 일부 수혜 가능성

10) The Budget Lab at Yale(2025)는 트럼프 관세로 올해 미국 전체 의류 가격 64% 급등, 식품 3%, 자동차 19% 상승 전망이며, 가계당 구매력은 평균 680만원 가량 하락 전망

11) WTO(2025)는 더불어 트럼프 관세는 상품에만 적용되지만, 그 영향은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비스 무역 규모도 종전 예상치에서 1%p 하향 조정한 4.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04 | 시사점

◆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과 對美 조치는 신중한 입장 견지 필요

-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트럼프 1기 美·中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존재

◆ 對美 무역흑자 완화 위한 3-track 접근

- (對美 상품 수입 확대) 美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활용, 미국 산업계의 對韓 수출 수요를 고려해 해당 시장의 개방 확대 시 우리기업에 미칠 파급 영향을 조사하고,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은 단계적 개방 검토
- (對美 수출 의존도 감소) 한국은 여러 국가를 경유한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바,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제3국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 극대화 필요
- (對美 투자 확대)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TSMC 등의 사례로 보았을 때 단순히 기업의 투자만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투자 방안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모아 최적의 협상조건을 도출할 필요
 - 다만, 지난 트럼프 취임식에서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을 드러낸 바, 對美 무역흑자 완화가 우선 과제일 것으로 판단

◆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연방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량 많은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외국과 독자적 무역관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4/4)한데 이어, 불법 관세 부과 혐의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발표(4/16)하는 등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갖는 州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발 심화

* 캘리포니아는 연간 GDP 5706조, 교역량 988조원으로 텍사스에 이어 경제규모 2위, 수입 1위이며, 수출의 87%, 수입의 89%가 제조업 제품으로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음

- 현재 미국 헌법에서는 주 정부가 외교 및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행보가 연방정부의 정책 수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

◆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

- 교역 상대국에 대한 美정부의 무역제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선제 발굴, 對美 아웃리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조치 필요

-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美무역대표부가 제시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강하게 비판하고, 소비 약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장벽으로 지목

- 한편, 美관세국경보호청은 4월 초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 인도보류 명령을 발동하고 해당 염전서 생산된 천일염 수입을 차단

*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은 노동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라 설명하는 한편, 강제 노동 통한 제품 생산은 불공정 거래를 유발,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

-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을 이유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무역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

◆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

-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가격이나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 축소
-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폐기,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반드시 관세 조치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검토 필요
 -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이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수입규제 조치가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신흥국이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국 제품에 대한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치 건수도 증가 추세로, 보다 적극적인 수단 검토 필요

◆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및 크로스 보더 M&A 시장 모니터링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 제재로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갖춘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 증가
- 중국의 우회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A 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우리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

- 일본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 간 새로운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지원

*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및 트럼프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 폐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혼다는 기존에 일본과 중국에서 배터리 구매해 미국 공장으로 수출했으나, 관세에 직면한 이후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미국 도요타 공장서 조달(4월~)

- 미국에 중간재 생산 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 지원, 또는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검토 가능

* 예: K-뷰티 컨소시엄을 구성,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정부 지원 기조 전환

- 미시적으로는 관세 표적 산업과 對美 수출 규모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대체 불가한 첨단기술 확보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 High-end 제품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 점유

- 다만 트럼프는 중국 정부의 산업 및 기업 지원 정책이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바, 특정 산업(예: 울산-자동차, 포항-철강)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거시적으로는 AI, 양자 컴퓨팅 등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절대우위와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 필요

-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중심 K-테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 가능

참고자료

[국내 문헌]

교보증권(2025),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화장품 산업 영향 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한상의(2025), 「우리 제조기업의 美관세 영향 조사(n=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

에너지경제연구원(20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6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5),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2024), 「2024년 美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2025),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

현대경제연구원(2018),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IBK경제연구소(2025), 「美 보편관세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

iM증권(2025), 「트럼프 관세 산업별 영향」.

[외국 문헌]

The Budget Lab at Yale(2025), The Fiscal,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a 20% Broad Tarif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World Trade Organization(2025),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기사 인용]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2116025#c2b>(2025. 3. 2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11004001#c2b>(2025. 3. 31).

네이트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32277>(2025. 4. 8).

뉴스1,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753406>(2025. 4. 15).

뉴스시스, https://www.news1s.com/view/NISX20250328_0003118027(2025. 3. 29).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5_0003127798(2025. 4. 5).

마켓인,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381686642070520> (2025. 2. 1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267159>(2025. 3. 18).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3월 수출입동향」, 보도자료(2025.4.1).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world-general/2025040814172296163> (2025. 4. 8).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0403171809773>(2025. 4. 3).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50408180253656>(2025. 4. 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057600003>(2020. 3. 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50211000300044>(2025. 2. 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148100009>(2025. 4. 9).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5/03/28/7PKR6UAHUZCMZOYV HUBNJ76PNU/>
(2025. 3. 8).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526>(2022. 5. 8).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107>(2025. 3. 8).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614>(2025. 3. 1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054>(2025. 4. 4).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수출, 1,151억달러 기록(+4.9%)」, 보도자료(2025.1.24.).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중소기업의 연이은 관세 파고 극복, 중기부와 관세청이 두 손 맞잡고 지원한다」, 보도자료
(2025.4.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90951.html>(2025. 4. 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613881>(2025. 2. 26).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05541_36725.html(2025.4.11.).

[인터넷 자료]

법무법인(유) 세종(2025), "미국 해당의 날"과 미국發 관세 쓰나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2783>(검색일: 2025. 4. 9).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2023), "자동차부품매출현황", <https://kaica.or.kr/business/status2.php> (검색일:
2025. 4. 11).

부록 1

표 4 '25년 美 USTR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기술 장벽	화학물질	• 한국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4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이행 방법에 대한 지침 부족, 영업비밀 보호 조치 미흡, 테스트 대상 화학물질 선정 및 방법론의 투명성 부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포장재 및 라벨	• 한국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른 포장 공간 비율 계산 방법의 명확성 부족 등 우려
위생 및 검역 장벽	농업 바이오기술	• 한국의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의 비효율성(중복심사, 과도한 자료 요청 등)과 산업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개정 계획에 우려 표명
	소고기	• 30개월 미만의 월령 제한 및 일부 가공육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반추동물 유래사료	•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 재개
	원에 작물	• 미국산 블루베리, 감자, 체리, 사과, 배, 딸기 등에 대한 시장 확대 요청
	잔류 농약 기준	•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언급
정부 조달	암호화 및 보안 요구사항	• 韓·美는 국제공동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의 회원국으로, 한 CCRA국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다른 CCRA국가에서도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받아야 하나, 한국 국정원은 보안평가제도를 통해 국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 한국시장 접근 제한 주장
	클라우드	• 클라우드 보안 보증 프로그램이 '22년 행정지침에서 법적요건으로 격상된 이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진출 제한 주장 하며, 이를 국제 표준과 일치시킬 것을 촉구
	국방 조달	• 외국 방산 기술보다 자국 기술 및 제품 우선시, 방산계약 규모 1천만 달러 초과 시 외국 계약자에게 상쇄 의무 발생 가능성
지재권 보호		•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재권 보호 위한 민·형사상 처벌 부족

구 분		주요내용
서비스 장벽	시청각 서비스	• OTT 등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에 부과가 논의되는 규제들에 우려 표시
	금융·보험	• 재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위험관리 등의 목적으로 국외소재 본사에 개인 신용정보 이관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과 관련, 실무적 명확성 요구
	법률시장	•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소유지분 49%로 제한, 합작법인 구성 로펌의 자국 내 최소 3년 이상 활동 요구, 합작투자 참여 외국 로펌은 한국로펌과 별도 법인 설립 의무 등으로 합작투자 업무 범위 제한 및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 시장 진입 저해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사용료	•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우려 표시
	경쟁 정책	• 한국 정부가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우려 표시
	위치 기반 데이터	•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으로 해당 서비스(내비게이션 등)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와 한국 업체 간 불공정 경쟁 주장
	데이터 현지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및 위반 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 해당 업종의 초국적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
	핵심기술 장벽	• 한국 정부가 산업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에 악영향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관리하며, 외국 CSP(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
투자 장벽		• 라디오·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뉴스 에이전시 활동에 외국인 소유를 25%로 제한, TV프로그램·케이블 및 모든 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 49% 제한, 비원자력 발전 외국인 소유 30% 제한, 육류 도매업·전력·화물운송·소형항공·신문 등에서 외국인 소유 50% 제한 등
기타 장벽	자동차	•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의 불명확성 우려
	제약 및 의료기기	• 한국의 약가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 부족에 우려 제기

* 자료: 美 USTR의 NTE보고서(2025)와 한국무역협회(2024)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발 행 인 조주현

편 집 인 이동주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 쇄 처 디플러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